'당권 도전'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 전북 방문

"2년 임기 중책 완수 당대표 될 것"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국립공공의료대 설립 등
전북 현안 적극 추진"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당권 도전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의원이 8일 전북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 전의원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인 전주에 온 소회를 전했다.

이어 영.호남을 하나로 끌어안고, 2년 임기의 중책을 완수하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성공, 민주당 재집권의 과업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의원은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지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전북의 당면한 현안들도 직접 챙기겠다고 피력했다.

재정분권을 더욱 확대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확대해 전북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정부로서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새만금 산업단지 활용,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산적한 전북의 현안들을 적극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전의원은 당대표가 되어 "더 큰 민주당을 만들겠다"면서"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의 꿈을 완성하고, 당대표 임기 2년의 중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세계최대 아동성착취물 운영자 美송환 불허 규탄"

진보당 전북도당
"손정우가 받은 형량
말이 안돼" 사법부 질책

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난 6일 대한민국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결정하자 8일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진보당 도당은 "그동안 국민들이 손정우의 아동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부여하는 미국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 세계적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며 성토했다.

또, "얼마 전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량이 1년 8개월, 성범죄자 손정우가 받은 형량은 1년 6개월, 말이 안된다"라며 사법부의 양심과 정의를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내린 강영수 판사가 현재 대법관 후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대법관 후보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 관련된 판사 전원에 대한 자격박탈과 송환 결정 재심사를 요구했다.

/유호상기자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재원 배분 불균형 바로잡는다

민주 윤준병 의원, 지방세법 · 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전북을 비롯해 전남 등 전국 12개 시군의 묵은 현안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재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원자력발전 소재지 시·도만 지원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시도(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12개 시군(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 강원 삼척, 경북 봉화, 경남 양산, 부산 해운대·금정,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이 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당초 8~10km 이내로 규정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30km까지 확대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되었지만 소재지 시·도 밖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보관으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날 지방세법과 함께 발의된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에는 당초 재정력 격차 해소 및 안전관리사업 필요 비용 마련이라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포함된 시군에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송지용 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연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부겸 전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송 의장은 이날 오후 도의회 의장실에서 김 전 의원과 만나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0여 년이 됐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서, "주민조례발안이나 주민소환제도 등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행안부장관때 추진한 재정분권을 강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염 시장도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 현안에 공동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9일 10시까지 답하라"…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에 최후통첩

"벌써 일주일 지나… 사법 혼돈에 국민 답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이 늦어지자 마감시한을 제시하고 나섰다.

사실상 추 장관이 최후통첩에 나선 것인데, 윤 총장이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10시 법무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며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한다"며 "더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수사지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수사지문단 절차를 일단 취소했지만, 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지난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대검은 지난 6일 검사장 회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 ▲특임검사 도입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는 위법 ▲윤 총장 거취 연계 반대 등이 골자다. 회의 내용은 법무부에도 전달됐지만,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정작 윤 총장의 입장표명이 늦어지자 추 장관은 전날에도 법무부를 통해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